

414

# ‘기후정의파업’을 돌아보며 다음투쟁을 그린다

414기후정의파업 평가 토론회

2023. 5. 11.(목) 14: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서울 정동길)

사회 | 한재각(414 공동집행위원장)

발표

414 기후정의파업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과제 \_ 정록/414 집행위 기획팀장

지정 토론

지역에서 만들어낸  
전국 투쟁의 경험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생태학살, 난개발 반대 투쟁과  
기후정의운동

정규석  
/녹색연합

414를 계기로 활성화된  
지역 기후정의운동

(김미리내  
/광주녹색당)

414 기후정의파업의  
사회운동적 의미

(김선철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대중적 기후정의운동의 장으로서  
하반기 투쟁

강은빈  
/기후위기비상행동

플로어 토론

주최\_ 414기후정의파업조직위원회

- 자료집 순서 -

[발제]

414 기후정의파업의 성과와 과제	3
414 기후정의파업 집행위원회	

[토론]

1. 지역에서 만들어낸 전국투쟁의 경험	10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2.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	12
이승철(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	
3. 정말 구체적인 정세 속에 가장 긴요한 요구였다.	17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4. 414기후정의파업, “광주” 지역 조직 과정을 중심으로 한 회고	18
미리내(414광주기획팀/광주녹색당)	
5. 기후정의운동의 영향력 측면에서 414 기후정의파업 돌아보기	22
김선철(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6. 대중적 기후정의운동의 장으로서 하반기 투쟁	26
강은빈(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414 기후정의파업의 성과와 과제

414 기후정의파업 집행위원회

### 1. 414 기후정의파업은 어떤 투쟁을 펼쳤나

2023년 1월 2일, 중부지역 사회운동단체들과 전국 곳곳의 기후정의 투쟁대책위들, 기후정의동맹이 ‘4월 세종 기후정의행진(가칭)’을 제안한다. 이에 호응해 109개 단체가 참여해 1월 26일 1차 조직 위 회의를 개최한다. 1차 조직위 회의에서는 3천 명 이상이 함께 하는 ‘반자본 대정부 투쟁’으로 ‘414 기후정의파업’을 결의한다.

2월 28일, 414 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대방향, 6대 핵심요구, 13개 투쟁요구로 구성된 ‘대정부 요구’를 발표하고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기재부, 탄핵위에 대한 민원접수와 항의방문을 진행한다. 3월 11일, ‘기후위기 시대, 공공요금 인상 어떻게 볼 것인가’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고, 3월 18일에는 전국의 난개발 현장들에서 벌어지는 ‘생태학살에 맞서 싸우는 이들의 성토대회’를 진행했다. 3월 28~29일, 4월 3일에는 각각 산업부/탄핵위 규탄의 날, 국토부/환경부 규탄의 날, 기재부 규탄의 날을 세종청사 각 부처 앞에서 진행했다. 또한 영터리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과시켜려는 탄핵위 규탄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을 3월 28일부터 일주일동안 진행했다. 4월 4일 ‘414 기후정의파업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414 투쟁의 의미와 요구, 함께 참여하는 주체들의 결의를 언론에 알렸다. 4월 4일부터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414 기후정의파업 참가선언 릴레이 기자회견이 10개 지역에서 이어졌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널리 홍보하고 414 투쟁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기후정의파업가이드북’, ‘웹툰으로 만나는 기후정의파업’, ‘길라잡이 카드뉴스’, ‘나의 하루를 멈춥니다 영상인터뷰’ 등을 제작했다.

4월 14일(금) 2시부터 세종정부청사 탄핵위 앞에서 시작된 ‘414 기후정의파업’은 371개 단체 소속 회원, 905명의 추진위원 및 시민 등 4천여 명이 함께 했다. 탄핵위, 산업부, 환경부/국토부 순으로 행진하며 각 부처 앞에서 ‘대정부 요구’를 적은 종지와 선전물을 붙이고 규탄발언과 항의를 이어갔다.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지역대책위 활동가들의 절절한 규탄발언과 다양한 사회운동단체와 개인 참여자들의 힘찬 투쟁이 어우러지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4천여 명이 세종청사에서 기후정의 투쟁을 펼쳐냈다. 또한 4월 14일 당일 세종에 함께 하지 못하는 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정부부처에 대한 ‘팩스총공 온라인 행동’을 진행했다.

### 2. 414 기후정의파업 제안의 문제의식

## 1) 정세를 만드는 기후정의 ‘반자본 대정부 투쟁’의 필요성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슬로건 아래 3만여 명이 모였다. 그해 여름 수도권을 강타한 폭우 피해는 기후재난에 대한 감각을 일깨웠고,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 종식’, ‘모든 불평등 종식’,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요구로 내걸었다. 또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라는 기치아래 다양한 사회운동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들은 구체적인 투쟁의 요구였다기보다 그 자리에 모인 ‘우리’의 ‘지향과 다짐’을 확인하는 것에 가까웠다.

게다가 2022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와 안보 위기,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와 경기침체까지 시작된 상황이었다. 점점 일상이 되고 있는 가뭄, 폭우, 산불,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과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중첩되며 시민들의 삶의 위기와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윤석열 정권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부채질하며 ‘자본의 영업사원’을 자처했다. 오로지 이윤을 위한 에너지/기후 정책에 따라 에너지 요금을 필두로 공공요금은 폭등했고, 정부는 핵발전예사활을 걸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은커녕 기업의 민원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다.

924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한국 사회에 등장한 ‘기후정의운동’은 이제 보다 분명한 투쟁 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구체적인 정세 속에서 지금 가장 긴요한 요구들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투쟁들을 조직해야 하는 것이다. 자본의 하수인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의 반기후 정책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며 체제전환을 향한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요구와 힘을 모아내는 투쟁의 장이 열려야 했다.

## 2) 각 지역 투쟁 현장의 요구와 주체들을 연결하는 전국적 투쟁의 필요성

전국 곳곳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송전탑,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농어촌파괴형 재생에너지,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핵폐기장 건설에 맞서 싸워온 지역 주민들과 해고에 맞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온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모두 기업의 이윤보장에만 혈안이 된 정부의 비민주적, 반생태적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기후위기 시대, 대표적인 기후부정의의 현장인 것이다. 이 투쟁들이 외치는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탈핵’,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과 고용보장’, ‘신공항 건설 중단’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외쳐야 할 기후정의의 요구와 대안이 되어야 했다. 기후정의운동은 암울한 종말론과 유토피아적 청사진을 넘어, 현실에 굳건히 발딛으며 지금 벌어지는 구체적인 투쟁들로부터 체제전환의 경로를 밝혀가고 사회적 힘을 결집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투쟁들은 각각의 고립된 ‘지역’의 투쟁이 아니라, 기후부정의의 ‘현장’으로서 지역의 싸움이 연결되고, 공동의 요구와 투쟁이 될 수 있어야 했다. 세종정부청사를 기후정의파업의 장소로 택한 이유이기도 했다. 동시에 세종청사는 ‘반자본 대정부 투쟁’의 장소이면서 각 지역의 투쟁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현장’이었다. 정부청사가 위치한 세종이라는 지역이 갖는 ‘현장’의 의미

였다. 414 기후정의파업을 제안했던 중부지역의 기후정의운동단체들은 이 현장을 전국적 투쟁으로 조직하겠다는 결의를 밝힌 것이기도 했다. 414 기후정의파업은 ‘지역’을 기후정의투쟁의 ‘현장’으로 조직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 3. 414 기후정의파업은 어떤 성과를 남겼나

#### 1) 기후정의운동의 정세적 요구를 제기하며 대중 투쟁을 조직했다

평일 세종에서 3천여 명이 모이는 대중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조직위의 목표는 달성됐다. 예상을 뛰어 넘는 4천여 명이 함께 한 414 기후정의파업이 힘차게 펼쳐진 것이다. 570여 명이 참여한 사후 평가설문에 따르면 77%는 소속단체 동료들과 함께, 23%는 개인 참여자였다. 단체에서는 일상 활동을 멈추고 다같이 기후정의파업에 참여하지는 결정을, 개인이라면 생계활동을 멈추고 세종으로 모이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런 흐름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414 조직위가 기후정의운동의 정세적 요구로서 ‘대정부 요구’를 선명히 내세우고 조직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정세는 공공요금 폭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계문제, 설악산 케이블카/제주2공항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승인, 국토부의 가덕도 신공항 조기 준공계획 발표, 엉망진창 탄녹위가 발표한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분노가 그것이다.

특히 탄녹위의 기본계획은 공청회 하루 전 산업계의 배출책임을 대폭 축소한 초안이 발표되었고, 414 바로 직전에 의결되었다. 이미 문제가 많았던 탄녹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더욱 망가졌고 탄녹위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지만, 기후위기 대응 국가기구가 앞장서서 기업과 자본의 책임을 덜어주는 행태는 수많은 이들을 탄녹위와 세종청사로 불러모으기에 충분했다. 414 조직위는 기본계획 공청회 이후, 이를 규탄하는 각 지역들의 대응활동을 조직했다.

#### (1)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작년 한해 내내 인상된 전기/가스 요금이 겨울 난방비 급등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414 조직위는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 탈상품화와 요금인상 철회를 주장했다. 이 요구에 대해 조직위 내외부에서 이견과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414 조직위는 ‘조직위 토론’과 ‘공공요금 인상 쟁점 토론회’를 진행하며 해당 요구안의 사회적 의미를 분명히 했다. 기후정의운동은 전사회적인 ‘에너지 수요감축과 전환’을 분명한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가 바로 에너지 사회공공성이라는 것이다. 에너지 대부분이 자본의 이윤을 위한 생산에 소모되는 상황에서 자본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공공적 통제와 감축없이 에너지 수요감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수재인 에너지 소비에 대해 가격을 올려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오히려 에너지 요금인상을 통해 자본이 사용한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려는 행태였다.

‘에너지 요금 논쟁’은 이후 기후정의운동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논쟁이었다. 기후위기의 책임

과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는 주장은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통찰과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함께 맞서지는 주장은 좋은 말의 기계적 나열이 아니라, '무엇에 맞서 누구와 함께 싸울 것인지'에 대한 기후정의운동의 핵심원칙과 전략이 되어야 한다. 자본의 무한 성장과 이윤추적 회로는 지구의 생태적 한계와 존엄한 삶의 사회적 기초를 함께 무너뜨리는 착취수탈 체계이다. 이 구조를 문제삼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기후운동은 '환경 vs 노동', '환경 vs 사회적 권리'라는 잘못된 대립구도를 반복하게 된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보다 주거지 자체를 문제로 지목하게 되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주택에 누가 거주할 수 있는지 묻지 않게 된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지'에 대한 통제권과 결정권이 사회와 노동자에게 있지 않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탈탄소 산업전환'은 노동자 해고와 구조조정 도구로 되는 것이다.

414 조직위는 '에너지 요금 논쟁'을 통해, 기후정의운동을 선언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인 요구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대중을 조직하며,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많은 어려움과 부족함도 있었지만, 이를 통해 현재 우리가 겪는 수많은 위기들의 중첩 속에서 기후정의운동이 내야 할 길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다. 에너지를 비롯해 교통, 주거와 같은 존엄한 삶의 토대를 이루는 필수재들은 사회공동체가 함께 생산, 이용,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공공성의 가치 속에서 자본에 대한 통제와 함께 생태적 전환의 경로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 (2) 이윤을 위한 생태학살 개발사업 저지 투쟁과 기후정의운동

각종 산업단지, 주택단지, 케이블카, 계속 뚫리는 터널과 도로들, 골프장 리조트와 스키장, 4대강 사업 등 좁은 국토는 1년 내내 공사판이다.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수많은 현장에서 각종 개발사업들이 불러올 문제들을 알리며 치열하게 싸워왔다. 이러한 개발사업들은 흔히 토건자본과 결합한 정부와 지자체의 오래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때로는 '개발 vs 보존'이라는 협소한 대립구도로만 이해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후 생태위기 시대에 수많은 개발사업들은 이제 자연과 삶의 터전에 대한 자본의 체계적인 파괴와 수탈 시스템의 결과라는 점이 많은 이들에게 분명해지고 있다.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제주2공항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의 민낯을 윤석열 정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었다. 환경부에게 '산업부처'가 되어서 돈을 벌어들이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그것이다. 국비 수십 조원을 들여서 전국에 공항 10개를 더 짓겠다는 신공항 계획이 기후위기 시대의 비현실적인 부조리이기도 하지만, 그 물질적 토대가 바로 자본의 이윤추구와 그 시스템에 결부된 수많은 행위자들이라는 것 역시 분명해지고 있다.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개발사업의 결과는 생태학살이며, 기후위기는 이러한 생태위기의 일부일 뿐이다. 414 조직위는 '생태학살 성토대회', '환경부/국토부 규탄연설회' 등을 진행하고 기후 생태위기 시대에 각종 난개발사업들이 갖는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당일 현장에 모인 여러 개발사업 반대 투쟁들이 함께 모여 정부청사를 상대로 벌인 싸움은 이번 414 기후정의파업이 기후 생태위기 시대에 각각의 개발사업 반대 투쟁들이 고립된 투쟁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흐름을 조직하기 위한 싸움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또한 난개발사업들이 뭇생명과 주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는 곳을 파괴하는 폭력이라는 점을 증언하고 고발하는 자리였다.

## 2) 반자본 체제전환운동으로서 기후정의운동이 다양한 사회운동들의 공동 기반이 되고 있다

2019년 9월,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회가 한국사회에 최초로 등장한 대중적 기후운동이었다면, 2022년 9월 924 기후정의행진은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기후정의’라는 이름아래 함께 했던 자리였다. 2023년 414 기후정의파업은 노동, 여성, 농민, 인권, 장애, 반빈곤, 청년/청소년, 환경/생태 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자신의 운동을 ‘기후정의운동’으로 당당히 선언하고 나섰던 투쟁이었다. 기후정의동맹은 ‘414 기후정의파업 참가 선언운동’을 펼쳤고, 이에 호응한 30여개 단체가 414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각 단체들의 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참가선언을 발표한 단체 외에도, 414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한 여러 노동자들의 모습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발전노동자, 가스 노동자, 버스/택시노동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조 선소 하청노동자,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 보건 의료 노동자, 교육노동자, 건설 노동자 등 여러 직종의 노동자들이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기 위해 달려왔다. 이들 노동자들에게 기후위기는 소위 ‘환경문제’처럼 당장의 삶의 문제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종잡을 수 없는 날씨, 가뭄, 산불, 폭우 등을 겪으면서 이미 삶의 위기로 체감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책임이 기업과 자본에게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기후정의파업이 노동자의 파업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14 기후정의파업 당일 투쟁의 기운은 누가 누구에게 ‘연대’하는 투쟁이기보다, 여러 사회운동들이 자신의 싸움으로 ‘기후정의운동’을 함께 펼치는 공동의 싸움이었다. 참여동기를 묻는 평가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30%는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할, 19%는 자본주의 성장체제 변혁을 택했다. 또한 414 파업 당일 행동에서 인상적인 점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다양한 파업 참가자들과 함께 만든 기후정의 투쟁의 힘찬 기운’이었다. 평일 세종청사로 4천여 명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자본의 폭력’에 맞서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반자본 체제전환’이라는 지향과 전망을 기후정의운동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며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414 기후정의파업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반자본 체제전환을 향한 기후정의운동의 힘을 함께 확인하고 다음 투쟁을 도모할 수 있는 자신감을 모두 느꼈다는 것이다.

## 3) ‘지역’을 기후정의 투쟁의 ‘현장’으로 조직하고자 분투했다

414 기후정의파업은 조직위를 출범시킨 이후부터, 왜 투쟁 장소가 세종인지에 대한 질문이 늘 따라다녔다. ‘반자본 대정부 투쟁’의 장소로 세종보다는 서울 용산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반자본 대정부 투쟁’의 장소로 세종청사가 아닐 이유 또한 없으며, 414 조직위가 세종투쟁을 제안하고 조직하게 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각 지역의 투쟁들을 기후정의투쟁이라는 공동의 싸움 속에서 하나씩 호명하고 ‘현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였다. 석탄화력발전소, 핵발전소/핵폐기장, 농어촌파괴형 재생에너지, 송전탑/양수발전소 건설 등에 맞서 싸워온 지역 대책위들과 고용보장과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발전노동자들이 산업부 앞에서 함께 외치고 싸우는 경험, 케이블카와 산악열차,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여러 투쟁들이 국토부/환경부 앞에서 함께 외치며 서로를 확인

하는 경험이 그것이다.

한편 투쟁 대책위들, 기후정의동맹과 함께 414 기후정의파업을 제안한 ‘중부지역 기후정의운동’은 이 투쟁을 전국 투쟁으로 조직하고 성사시켜내는 중요한 경험을 축적하게 됐다. 모든 측면에서 서울수도권 중심성이 강력한 한국 사회의 특징은 사회운동에서도 깊은 흔적을 남겼다. 전국적 투쟁의 장소가 거의 언제나 서울이 되면서 이를 조직하는 사회운동의 기반도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에 반해 지역의 사회운동은 전국적 투쟁을 조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찾기 어려웠고 이는 지역 사회운동의 자원과 역량이 지역적 틀에 한계지워지는 조건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에서 만들어낸 전국 투쟁의 경험으로서 414 기후정의파업의 의미는 크다.

하지만 ‘지역’의 의미를 서울수도권과의 관계망을 벗어나서 사고할 필요도 있다. 즉 지역의 사회운동이 자신의 투쟁 과제와 전망을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화’하거나 ‘보편화’하기 위한 목적의 식적인 노력이 부단히 시도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사회운동에서 서울수도권이 갖는 특권적 위치는 ‘전국적 투쟁’의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크다. 이는 물론 동원가능한 자원의 크기, 정치경제적 중심지라는 물리적 조건 덕분이기도 하다. 이번 414 투쟁도 세종정부청사라는 중앙정부의 장소가 전국 투쟁의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만 기대 관행적인 투쟁은 결코 기후정의운동의 ‘현장’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지역 사회운동’이 지역적 한계와 의제에 갇힐 이유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보편적 사회운동의 주체와 역량이 조직되고 생성되는 토대이자 장소로서 ‘지역’이 사고되어야 한다.

## 4. 414 기후정의파업이 남긴 과제

### 1) 414 투쟁은 ‘반자본 대정부 투쟁’으로서 의미있는 사회적 흐름을 조직해냈는가

414 기후정의파업은 투쟁 제안의 문제의식부터 정세를 만드는 기후정의 ‘반자본 대정부 투쟁’의 필요성이었다. 4천 여명이 모일 수 있었던 주된 동력 역시 공공요금 폭등, 설악산 케이블카/제2공항 환경부 동의, 탄핵위 기본계획과 같은 정부의 반기후/친자본 정책들에 대한 선명한 반대를 조직했기 때문이다. 조직위 내부적으로 대정부 공동 요구를 성안하기 위한 치열한 토론과 함께, 언론기고, 대중 토론회,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414 기후정의파업의 주장과 대정부 요구를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분명 기후/환경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 내부적으로 유의미한 토론과 흐름을 조직해냈지만, 언론을 비롯해 정부 부처에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가, 의미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직했는가라고 묻는다면 물음표이다. 특히 공공요금 폭등과 관련해서는 보수-개혁을 막론하고 주류 언론들은 ‘에너지 요금 현실화/원가주의’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414 투쟁이 제기하는 주장과 요구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는 에너지 시장화/상품화라는 강력한 주류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일테지만, 414 투쟁의 기획과 집행이 갖는 한계와 과제라는 측면에서 돌아볼 필



요가 있다.

1월 26일 1차 조직위 출범부터 4월 14일까지 채 3달이 되지 않는 기간이었지만, 414 조직위는 당일 하루 투쟁을 넘어 의미있는 사회적 여론과 투쟁흐름을 만들고자 했다. 짧은 조직위 활동이 4월 14일 투쟁의 사전행동으로 부차화되는 게 아니라, 대정부 요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과 논쟁 그 자체로 위력적인 크고 작은 곳곳의 투쟁들을 조직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역부족이었다. 집행역량의 측면에서도 그러하고, 기후정의운동의 정세적 요구를 제기하며 뾰족하고 위력적인 투쟁이 되기 위한 전략적 흐름이 부족했다. 2대 방향, 6대 핵심요구, 13개 투쟁요구들은 함께 모이는 우리의 근거이기도 했지만, 단지 이러한 요구의 나열이 아니라, 2대 투쟁 방향에 따른 사회적 흐름과 투쟁을 조직하는게 필요했던 것이다.

414 기후정의파업의 ‘반자본 대정부 투쟁’은 ‘반윤석열 정권 투쟁’ 또는 ‘정권 퇴진 투쟁’과 같은 목표로 수렴되는게 아니라, 2대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회적 흐름을 조직하고 정부에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사회운동의 연합으로서 기후정의운동의 에너지와 활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당일 투쟁 기운을 넘어서 414 기후정의파업의 주장과 요구들이 얼마나 사회화되었는지 묻는다면, 이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 2) 기후정의운동이 직면한 과제와 하반기 투쟁

2019년 이후부터 기후운동은 9월 투쟁을 기획하고 조직해왔다. 414 투쟁을 마무리하며 현장의 수많은 이들 역시 9월 하반기 투쟁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기후정의운동의 외연은 더 넓어지고, 투쟁의 요구와 체제비판의 관점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와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다. 414 기후정의파업이 맞서고자 했던 공공요금 폭등은 여름을 지나며 더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각종 생태학살 개발사업, 탄녹위 기본계획의 집행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맞서 싸우고 저지해야 할 과제는 당장의 현실이 될 테지만, 우리의 투쟁은 얼마나 이에 맞서는 실질적인 힘이 될 것인가.

기후위기에 맞서고 기후정의를 외치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적인 기후정의운동의 장으로서 9월 투쟁이, 동시에 정세에 개입하며 의미있는 흐름을 조직하는 위력적인 투쟁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매년 9월에 ‘기후정의’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연례행사가 아닌, 기후정의운동의 진전과 사회적 변화를 추동해낼 수 있는 대중투쟁의 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반자본 체제전환운동으로서 기후정의운동이 자본의 하수인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과 정치기득권 집단일 뿐인 민주당을 일갈하며 사회적 세력으로 우뚝서기 위한 투쟁의 길을 함께 열어내자.

## 지역에서 만들어낸 전국투쟁의 경험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414 기후정의파업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생각한다.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이걸!” 지역에서만 활동했던 내가 왜 전국집회를 만들고 있는가 하는 고민이 414를 조직하고 진행하던 그 날, 사실 지금까지도 많은 한계와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활동가로서 414 기후정의파업을 통한 몇 가지 경험들은 의미가 컸다.

연대의 근육을 키워본 경험은 매우 의미있었다. 지역에 전국 단위가 모이는 집회의 실무와 책임은 쉽지 않았지만 기후운동을 통한 연대의 확장이 얼마나 파급력 있고 빠르게 진행되는가를 경험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긴 했지만 조직하기 위해 각 지역으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고 와달라 요청도 해주셨다. 조직재정팀에서 간 집회 발언, 선전전, 교육, 간담회를 세어보니 82건이었다. 2월부터 움직였으니 대략 잡아봐도 주에 10번은 414 기후정의파업 이야기를 하고다니는 셈이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태안에서 춘천까지 많은 도시들에 기후파업의 소식을 전했다. 2달만에 4천명이 평일, 지역에서 열리는 기후파업에 함께 해주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경험이었다. 또 ‘기후정의’가 다양한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반응하는 여러 조직, 단위를 움직이게 하고 있음을 경험하기도 했다. 전에 탄소감축의 중요함을 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반자본주의, 불평등으로 확장된 ‘기후정의’ 운동을 다양한 조직들이 자기 과제와 연결하고 있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만의 의제가 아니라 기후문제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의 과제로 확장, 분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들의 순서와 속도는 각개 다 다르고 반응 또한 매우 달랐던 듯 하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갈 지 알 수 없지만 414 기후정의파업은 이 흐름들을 한 번 모으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지역의 기후운동 주체들을 만난 것은 매우 큰 의미였다. 실제 대전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가본적 없는 민주노총대전본부 대의원대회에서 가서 발언을 했는데, 정말 낯선 경험이었다. 지역 환경단체에서 일하던 자가 갑자기 파업을 하자고 마이크 잡고 말하는데 얼마나 황당했을까도 싶다. 우리 지역 뿐 아니다. 강원도 양수발전소 투쟁하는 어르신들 앞에서 전기 많이 쓰는 대전에서 젊은 친구가 와서는 파업하자고 하는데 그 또한 낯선 장면이셨겠다 싶다. 음성, 수원, 춘천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였다. 기후파업 조직하며 함께 된 집행위원들은 대개 지역 노조, 단체, 마을활동가였다. 같은 운동을 해도 우리는 ‘처음 만난 지역 사람들’이었는데 재밌는 것은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느껴지는 동질감, 애뜻함이라는 것이 있었다. 평생 한 번 볼 일 없을 수 있었던 지역 활동가들을 기후운동으로 만났고 같은 결이든, 아니든 활동가들이 만나고 연락하며 어떤 일에도 모해 본 것은 다음 운동의 중요한 발디딤판이 될 것이라 본다. 지역운동이 ‘연대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 운동을 지속할 동력이 되기도 한다. 기후운동을 바탕으로 한 지역의 다양한 의제들에서

숨없이 연대를 요청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더 넓어지고, 다양해지기를 바란다.

414기후정의파업의 ‘반자본, 체제전환’은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자리잡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든다. ‘지역 운동이 이제 지역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운동의 주체와 역량이 지역으로 모이고 있었다’는 평가처럼 제주, 새만금 등 여러 지역과 공간이 전국사안의 시발점이 되었다. 지역에 어떤 사안에 전국의 활동가들이 결합하는 방식이 대부분 이었고(탈핵, 새만금, 신공항 사안들) 전국의제로 확대되지 않는 지역의 운동은 지역의 운동주체들이 각자의 역량을 모으고 그 역량 내에서 대응해 나가곤 했다. 성공하기도 하고, 한계를 맞이하며 지역운동은 분투해 왔다. 우리가 기후정의파업에서 외쳤던 반자본, 대정부 투쟁 행동과 의미는 당장 4월 15일부터 이미 각 지역에서 있던 투쟁의 현장, 새롭게 만들어질 운동들에 결합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현장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장남들을 보전하라’를 기억하실 것 같다. 장남, 장녀가 아니고 세종 행정수도 이전하면서 위협에 처했던 ‘장남들판’이다. 세종, 대전 등 인근지역 활동가들은 당연히 ‘장남들판’을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은 기후집회에 왜 장남들이냐 했을 것 같다. 9월 서울과 또 다르게 세종시 환경의제가 등장한 장면은 지역활동가인 저에게는 색다른 장면이었다. 행정수도가 아닌 지역으로서 세종의 의제가 드러나 반가운 마음이었다. 정말 그 지역 사람들만 아는 현장의 이름들(의제)이 있다. 그 이름이 드러나면 그와 비슷한 다른 지역이 이름이 엮인다. 세종 장남들판만 있겠는가? 개발로 위협받고 보전해야 할 다양한 생태계 보고, 습지들은 전국 환경단체 어디에 물어봐도 하나씩 그 고유한 이름들이 있을 것이다. 대전의 갑천, 대구의 금호강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고, 어떤 아름다움이 있냐 서로 이야기 하면 반드시 엮일 것이고 그것은 전국의 지역의 여러 하천, 강 운동들을 연결시킬 수 있다고 본다. 강하천개발사업 반대의 전국의 목소리도 이렇게 모아질 수 있지 않을까. 414는 비록 모두를 묶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이후의 만들어질 전국의 기후운동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지역활동가로서 경험한 협소한 내용들이고,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께서 제 토론의 빈자리를 앞으로 더 채워주시기를 바란다.

##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 : 성찰과 과제를 중심으로

이승철 /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

### 1. 공공운수노조 조직화 과정

#### 1) 추진 경과

- 1.19.(목) 민주노총 기후특위 2023-1차 회의,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참가 결정
- 2.22.(수) 2023년 정기대의원회, 기후정의파업 조직적 결합 의결
- 3. 2.(목)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응 2차 기획회의, 414 기후정의파업 결합방안 논의
- 3. 9.(목) 2023-3차 중앙집행위원회, 노조 사전대회 개최 등 참가방침 의결
- 3.31.(금) 기후정의파업 유관 부서 연석회의, 사전대회 기획안 및 역할분담, 조직 점검
- 4. 5.(수) 2023-4차 중앙집행위원회, 세부 결합방안 및 예산 등 의결
- 4. 6.(목)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대응 3차 기획회의, 현장 준비현황 점검 및 준비 논의
- 4.10.(월) 2023-14차 상무집행위원회, 집행계획 최종 점검

#### 2) 참가 현황

※ 2023-5차 중집 보고 기준

- 40여개 단위 600여명 참석

\* [환경에너지협의회] 일진파워 서부발전운영관리지부 발전HPS지부 발전기술 발전노조 가스공사 지부 가스기술공사지부 가스안전공사노조 금화PSC지부 KPS비정규직지회 가스비정규지부 지역난방안전지부

\* [운수협의회]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민주버스본부 택시지부

\* [지역지부] 서울지부 울산지부(준) 부산지부 전북평등지부 충북평등지부 경북지역지부 대전일반지부 경기지부 광전지부

\* [그 외 업종본부-지부-노조] 의료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 건보노조 공공연구노조 마사회지부 축산물품질평가원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희망연대본부 전국물류센터지부 중진공파트너스 지부

#### 3) 약평

- (조직) 준비 초기부터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환경에너지협의회 이외의 단위에서도 상당수 참가한 점은 고무적으로 평가. 목적의식적인 노조 사전대회 배치를 통해 반복적인 조직점검과 대오형성을 추진한 점은 추후 기후정의 실천 과정에서 참고해야

\* 철도노조 등 운수부문과 의료연대본부, 교육공무직본부의 경우 단위 내 기후정의 활동(기후단협, 조합원 기후컨텐츠 공모전 등)이 꾸준히 지속돼 왔다는 점이 있으나, 그 외 단위는 이번 기후정의파업을 계기로 결합력을 높인 것으로 평가

- (의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발전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한 것은, 관련 현안 투쟁을 펼치고 있는 노조로서는 큰 의미. 특히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국면에서 <공공요금 국가책임 강화> 전국 행진 및 캠페인 등 실천과, 기후정의 파업 준비 과정에서 부상한 공공요금 쟁점이 만나며, 오히려 조직에 긍정적 효과를 형성한 효과도 없지 않음.

- (집행) 발전노동자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상징의식을 현장과 함께 기획-준비하고 배치, 그 외 두 자리 수 이상 참가단위에 대해 상징물 혹은 퍼포먼스를 준비하도록 조직하지 못한 점은 과제. 아울러 - 당일 전술 운용 과정에서 노조 대오에 대한 민주노총 차원의 통솔과 지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

\* 가두 실천의 운용단위와 실천단위를 일치시켜 보다 안정적인 집행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의견

## 2. 성찰과 과제

### 1) 노조의 요구는 얼마나 구체화 되었나

- 공공운수노조는 2021년부터 '정의로운 전환'을 주요 요구로 격상하고, 관련 대정부 및 대국회 정책-투쟁 사업을 진행해 왔음.

\* 탈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공공운수노조 2021년 10대 요구)

\* 사회공공성 강화 기후위기 정의로운 전환 (공공운수노조 2022년 핵심 요구)

\* 녹색은 공공이다 : 정의로운 전환 (20대 대통령선거 공공운수노조 정책요구)

\*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전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요구)

\*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공공운수노조 2023년 공공성-노동권 확대 5대 요구) 등

- 이런 과정에서 4.14. 기후정의파업을 준비하며 '전사회적인 에너지 수요 감축과 전환을 위한 경로로 에너지 사회공공성'이라는 주장이 사회화되고, 활발한 논쟁 속에 수면 위로 확연하게 떠오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었음.

\* 이번 논쟁을 계기로 소위 시장주의 기후운동 단체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거나, 협력 프로젝트를 중단-재검토하는 사례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에너지 사회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공백이 많은 것이 사실.
- \* 노조는 그간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전공기업 통합을 통한 공공재생에너지공사 설립 및 국가투자 확대 ▲민자발전소 재공영화 ▲천연가스 직도입 제도 중단 등을 제기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을 내놓는 데에까지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분명.
-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전기 판매-송배전 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방증하듯, 에너지 공공성은 여전히 위협받는 상태임.

\* PPA 제도의 더 큰 문제점은 재벌-대기업 전력판매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임. 기업 PPA로 인한 판매시장 개방은 추가적인 또는 전면적인 판매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며, 윤석열 정부의 '허용범위 확대' 정책 역시 이를 의미하는 내용임. 연 60조원에 이르는 판매시장에 대한 민간 전면 개방이 전력산업 전체의 민영화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임.

\* 2023년 1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송전설비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송전설비에 대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검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 이미 발전영역에서 설비용량 기준 40%까지 민자발전의 점유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송전-판매 영역에서의 민영화(민간참여 허용)가 이뤄질 경우 결과적으로 전력산업 전 부문에서 민영화가 도래되는 것과 같음.

\* 2010년 설비용량 기준으로 14.2%, 전력거래량 기준으로 5.6% 수준에 불과했던 민자발전은 2023년 현재 설비용량 기준 40%까지 점유율을 높였으며, 2005년 포스코와 SK E&S를 시작으로 직수입이 본격화된 이후 2005년 약 33만톤 수준이었던 직도입 물량이 2020년에는 916만톤으로 크게 증가한 상황임.

- 이처럼 구체적이고 과감한 공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비해, 노조를 포함해 '에너지 공공성'을 주장하는 진영의 정책적 구체성은 여전히 모호하고 추상적. 지속적인 집회-가두실천 등 대중투쟁을 확산하는 것과 함께,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에너지 공공성 확대 로드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예산 개혁 방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함.

## 2) 노동자의 실천은 얼마나 확산돼 있나

- 공공운수노조의 기후정의 활동은 ①실질적인 고용문제와 맞물린 발전-가스부문을 선두로 한 환경에너지부문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②기후위기에 따른 질병부담을 체감하고 있는 의료부문, ③고온 실내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교육공무직부문, ④교통전환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궤도부문 등에서 자기의 정책적 과제나 조직적 실천을 모색-진행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내에는 ①택배-배달-통신 등 옥외작업 노동자 ②경유자동차 중심의 화물 운송 노동자 ③기후위기에 따른 난기류와 강풍에 따른 비행안전 위협에 시달리는 항공부문 노동자 ④태풍-산불-환경오염 등 기후위기에 따른 직접적 노동강도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노동자 등, 기후사업을 확산할 수 있는 근접 영향 노동자군이 상당함.

- 그러나 이들 노동자군에 대한 그간의 기후사업 접근법은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기후단협, 교양 수준의 교육 등) ▲지나치게 수동적(집회 참가 조직, 지침에 따른 서명 등)이었음.

- 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남-경남-인천 등에서 그나마 지역 유관사업장 연석회의 구성이나 지역단체 공동 활동 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그저 여러 의제 중 하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노조 차원의 반성적 평가 필요.

\* 그나마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국면에서 <공공요금 국가책임 강화>를 제기하면서 원가주의의 문제점과 이에 맞선 노조의 대안 요구 등이 제기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노조는 하반기 공공요금 추가 인상에 맞서기 위해 ‘중앙-지역 차원의 공공요금 국가책임 강화 연대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에너지-철도-지하철-버스 민영화-시장화 중단 및 재공영화 ▲가정용 (필수재 화성 에너지) 인상 철회 및 대기업 요금 특혜 폐지 ▲공공 주도의 녹색 전환 강화 ▲공공요금 결정기구 노동자-시민 참여 보장 등을 적극 제기하기로 결정

### 3) 하반기 ‘공공성-국가책임 강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 공공운수노조는 하반기(9~10월) 노조 내 주요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공동파업을 결의하고 조직사업에 돌입한 상태

-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민영화-시장화-영리화 정책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아내기 위한 목적이 핵심. 이에 따라 파업대오 역시 민영화-국가책임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형성될 것. 민영화 저지는 공공성 강화와 가장 연관성과 친화력이 높은 의제이며, 공공성 강화는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에너지-노동 전환’을 제기하는 핵심 경로이기도 함.

<p>: &lt;110대 국정과제(2022.5.3.)&gt; 중 민영화 관련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민간사회서비스 공급기관 지원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민간병원 정책수가 제도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전달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공공기관 업무 상시적·주기적 점검 및 재조정 등</li></ul> <p>: &lt;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6.16.)&gt; 중 민영화 관련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공-연금개혁 ▲건축재정 기초 확립 ▲범부처 성과관리 체계 구축 ▲강도 높은 공공기관 기능-인력 조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민영화-영리화 추진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등</li></ul> <p>: &lt;국가재정전략(2022.7.7.)&gt; 중 민영화 관련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 관리 등 건축재정 기초 확립 ▲재정준칙 법제화 ▲정부 지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자산 매각 ▲민간투자 규모 확대 ▲시장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사용 ▲기업규제 완화 ▲연금개혁 및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li></ul> <p>: 행안부 &lt;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2022.7.27.)&gt; 중 민영화 관련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구조개혁(유사중복 기능조정, 민간경합 사업 정비) ▲재무건전성 강화(부채관리 강화, 사업과 자산 정리, 경영평가 재무지표 강화) ▲민간협력 강화 등</li></ul> <p>: &lt;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022.7.29.)&gt; 중 민영화 관련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민영화(민간부문 유사-중복업무 기능조정) ▲구조조정(조직-인력-예산 효율화 및 자산매각)</li></ul> <p>: &lt;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8.18.)&gt; 중 민영화 관련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이윤 등 재무성과 중심의 경영평가 지표 변경 ▲민간 협력 강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공공</li></ul>
--

기관 재무건전성 제고 ▲직무 성과 중심 운영을 위한 직무급 도입의 양적 확대  
 :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2022.9.5.)> 중 민영화 관련 주요 내용  
 ▲구조개혁(유사중복 기능조정, 민간경합 사업 정비) ▲재무건전성 강화(부채관리 강화, 사업과 자산 정리, 경영평가 재무지표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직무성과 중심 인사보수, 복리후생 점검 강화)  
 : 대통령실 <복지정책 방향 브리핑(2022.9.15.)> 중 민영화 관련 주요 내용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확대 ▲돌봄 요양 등 민간주도 고도화 ▲대형 자본의 유치를 통한 사회서비스 영역 확대 등  
 :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2022.10.6.)> 중 민영화 관련 주요 내용  
 ▲재무성과관리 항목 배점 2배(10→20) 상향 ▲민간이양-자산/지분매각 등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이행 가점 배점(5) ▲안전 및 환경 배점 축소(5→3.5) ▲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 지표 배점 감점(10→5) 등  
 : <공공기관 자산매각 방안(2022.11.11.)> 중 민영화 관련 주요 내용  
 ▲자산 매각 12조3천억 ▲지분 매각 2조 2천억 등  
 :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12.26.)> 중 민영화 관련 주요 내용  
 ▲공공기관 정원 17,230명 감축 및 4,788명 재배치(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 등) ▲유지-보수-관리-보안업무 민영화-외주화 ▲설비점검주기 연장 등

- 노조는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도시철도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 등 입법안을 지난 해 말부터 발의-추적하는 한편, ▲공공재생에너지공사 설립 방안(입법 및 제도) ▲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노동자 지원 방안(입법 및 제도) 등의 구체적인 대안 요구(쟁취목표)를 구성하기 위한 연구 사업에도 착수.

- 이와 같은 투쟁이, 4.14. 기후정의파업이 지향했던 ‘반자본-대정부 투쟁’의 의미 있는 사회적 흐름과 동행하고 상호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도 역할을 다 할 것.



## 정말 구체적인 정세 속에 가장 긴요한 요구였나

정규석(녹색연합 사무처장)

철 지난 토건의 레토릭에 맞선 ‘생태학살’이라는 외침은 환경생태 운동을 포함한 모든 기후 운동에 분명한 이정표 중 하나가 되었고, 414 기후정의 파업의 중요한 성과다. 환경운동가의 일원으로 감사한 일이기도 하다. 환경생태 운동과 기후 운동의 방향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고 중요한 구심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였다. 보호지역을 두고 벌이는 난개발, 공항에 공항을 얹히는 아수라, 기후위기를 핑계로 달려드는 토건 자본의 작태 등 우리가 마주한 전선을 확연히 구분해 냈다.

하지만 비상한 시국의 비상한 결의에 비춰 세종에서의 3천 대오는 지극히 현실적인 목표였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그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이룬 것은 414 조직위가 ‘기후정의 운동의 정세적 요구로서 대정부 요구를 선명히 내세우고 조직하는 과정’이 주효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겠지만 비상한 시국에 비상한 결의의 장이 때마침 필요했던 이유가 더 컸다고 읽힌다. 물론 414 조직위가 근 닉 달에 걸쳐 보여준 치열함은 그 자체로 충분한 성과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 계기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414 기후정의 파업의 구체적인 결과를 조직위의 치열함과 열의의 중요성으로 손쉽게 등치 시키기엔 그야말로 ‘구체적인 정세’가 단순하지만은 않았고 또 없다는 것도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선명함을 내세우는 것에 우리의 합의와 그 통용에 무리는 없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실기는 없었는지 치열함을 이어가야 한다. ‘에너지 요금 현실화’가 단순히 ‘원가주의’로 연결되는 단선적 흐름이었는지, ‘에너지 시장화와 상품화’가 ‘강력한 주류 이데올로기’였고 그 결과가 주류 언론의 침묵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우리는 좀 더 다층적인 분석과 과제설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토론해야 한다. 물론 단순히 대오를 늘리는 것에만 매몰되기보다 단호한 메시지를 만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향이 없는 속도보다 방향이 있는 속력이 우리에게서 더욱 절실하다. 그렇다고 그 선명함이 교조적으로만 흐르지 않았는지 시민과 폭넓게 호흡할 수 있는 충분한 기제를 탑재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 414기후정의파업, “광주” 지역 조직 과정을 중심으로 한 회고

미리내(414광주기획팀/광주녹색당)

\*이 토론문은 광주기획팀원들과 함께 토론한 결과물이 아닌 제 개인의 의견임을 밝힙니다.

기후정의파업 준비 과정부터 성과, 그리고 이후 과제까지 도출된 발제문을 보면서 ‘414를 계기로 활성화된 지역 기후정의운동’이라는 주제로 어떤 토론을 할 수 있을까, 뾰족한 쟁점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를 찾아보았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제문의 내용을 토론하기보다는 제가 함께 참여했던 414광주기획팀의 조직 과정 및 414를 경유하며 들었던 고민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I. 3/9~현재까지의 활동 상황

- 3/9 ‘성난비건’ 활동가 2인과 첫 회의(기획팀 조직하기로 함)
- 3/15 광주기획팀 1차 회의 진행(7인의 기획팀원 모집)
- 3/23 414기후정의파업 광주 설명회 개최(유튜브로 함께 송출함)



-4/3 광주참여자 네트워킹 모임(414파업 참여 계기 나눔, 피켓 만들기)



-포스터 행동

-4/14기후정의파업 참여('빨간색'을 소품으로 함께 함)



-4/21 참여자 아카이빙 모임

(개인의 '기억'을 넘어, 사회적 '기억'으로..개인의 '기록'을 넘어, 사회적 '기록'으로)



-414기후정의파업 그 후 전시 (5월 중)

## II. 414를 경유하며 들었던 고민 몇 가지

### 1)기후정의운동 세력화[힘을 가지게 되]는 가능한가. 혹은 되어야 하는가

414기후정의파업 이후 참여한 분들을 중심으로 그 날의 기억을 공유하는 아카이빙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날의 기억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때론 글로 노래로 함께 나눈 후 광주에서 기후정의 운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당시 414기후정의파업에 함께 가기도 했던 한 분이 ‘세력화’라는 단어를 꺼내어주었습니다.

광주는 기후위기에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단체들의 네트워크로서의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내년 총선 기후후보 발굴 및 당선을 위한 ‘광주기후동맹’, 청소년청년기후위기운동 동아리 ‘1.5도씨’ 등 기후위이라고 하는 의제 아래 다양한 당사자들과 단체들이 활동 중입니다. (제가 파악하지 못한 더 다양한 네트워크와 동아리, 모임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광주전남의 거대 정당인 민주당 내 기후위기를 자기의 중심의제로 하는 정치인들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작년 924기후정의행진과 올해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상황을 저는 하나의 현상으로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9.24기후정의행진 당시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광주비상행동)은 조직적 참여를 결의하지 않은 채 9.23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집중기후행동’이라는 이름으로 250명 가량의 시민이 플래시몹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광주비상행동 내에서는 발제문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사회운동에서 서울수도권적 특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 하에 그 특권에 ‘동원’되지 말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평생 일해온 노동현장 폐쇄를 이야기하는 발전노동자들에게 연대하기 위해, 생태학살현장을 다 찾아다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국토부와 환경부에 소리치기 위해 세종으로 갔던 이들과 그러한 전국단위의 투쟁에 ‘동원’되고 ‘소진’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닌 이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이 광주라고 하는 인식을 414를 준비하며 더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 그리고 ‘기후정의’라고 하는 오늘의 현실에 대한 정의도 다른 이 지형 안에서 독립적인 ‘기후정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질문을 큰 틀로 ‘어떤’ 힘을, ‘어떤’ 방식으로 모아, ‘어디에’ 쓰고 싶은건지. 아니 애초에 우리는 ‘힘’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건지. 이야기나눌 수 있는 자리를 더욱 더 자주 더 조직해 나가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 2)‘기후정의운동’을 광주의 의제로 언어화하기!

공사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되어 노동자 6명이 사망했음에도 보란 듯이 아파트가 올라가고 지하철 2호선 공사로 도시 전체가 공사판이 된 지 오래. 매일 동복댐 저수율이 몇 프로라는 문자가 오

고 곧 제한급수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가 몇 달째 반복되고 있는 곳 (이미 전남 완도와 진도 등 28개 마을에는 이미 식수원이 고갈돼 3천800가구, 7천415명이 제한 급수나 운반 급수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바로 근접한 영광 핵발전소는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건설 계획'이 승인되었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조건부 허가된 후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가 공론화되고 있는 곳.

바로 제가 밭 딛고 살고 있는 광주의 이야기입니다. 광주의 지역 경제는 기아자동차와 원, 하청, 그리고 타이어를 생산하는 금호타이어로 굴러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인데 당장 2035년 내연 기관차의 신규 판매 금지 정책이 도입된다고 하면 자동차 산업 전반이 커다란 도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토건 산업의 폐해, 핵발전소에 위험노출, 예상되어지는 생태학살,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드러날 불평등, 산업 전환에 있어서의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기후정의운동에서 다루어졌던 원인이면서 결과인 문제들이 결국 광주라고 하는 지역에서 왜 기후정의운동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물론 '지역 사회운동'이 지역적 한계와 의제에 갇힐 필요가 없고, 오히려 보편적 사회운동의 주체와 역량이 조직되고 생성되는 토대이자 장소로서 '지역'이 사고되어야 한다(발제문 6p 인용)는 주장에 일면 동의합니다. 구체적 지역 사안과 기후정의운동의 의제들의 연결짓기가 이후 기후정의운동을 조직하고 만들어감에 있어서 상상력을 제한할 수도 있고, 이번 414 기후정의파업의 경험처럼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고, 현장과 현장이 연결되는 경험보다 지역 사안만으로 고립되기 쉬운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또한 존재합니다.

제가 414의 준비과정에서 가장 주목했던 것은 발제문에서 언급된 대로 자신들의 운동의제를 기후정의 의제와 결합해 목소리를 내는 단위들의 파업 참가 선언운동이었습니다. 그 선언 속 언어들 은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후정의운동'의 흐릿함을 선명하게 드러내주며 대중들을 훨씬 더 설득해낼 수 있는 운동이자 작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작업, '지역=광주' 과 기후정의운동의 의제를 연결짓기! '지역에서 기후정의운동하기' 이건 과연 가능할까요. '서울' 중심을 벗어나 '세종'에서 펼쳐진 이번 414기후정의파업이 다양한 사회운동 단체들과 중부권 활동가들의 기후정의운동 역량이 강화되는 성과를 남겼다면 어쩔 414 이후의 과제는 각 지역의 기후정의운동 역량 강화이지 않을까 하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지며 토론문을 마칩니다.

## 기후정의운동의 영향력 측면에서 414 기후정의파업 돌아보기

김선철(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414 기후정의파업(이하, 414)은 외연 확장과 활동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924 기후정의행진을 포함하는 기후정의운동이 대체로 “지향과 다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왔으며, 그렇기에 “보다 분명한 투쟁 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싸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발제문은 414의 성과로 1) 에너지 위기 속 공공요금 인상, 반생태적 난개발 밀어부치기, 산업계 봐주기식 탄핵위 기본계획 등에 대한 분노에 조응하는 “정세적 요구로서 ‘대정부 요구’를 선명히 내세우고 조직하는 과정”의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진행된 점, 2) 기후정의운동이 “다양한 사회운동의 공동 지반”으로 자리매김하며 “다음 투쟁을 도모할 수 있는 자신감”을 느끼게 한 점, 그리고 3) 세종 충청 등 중부지역 기후정의운동의 경험 축적과 “기후정의 투쟁의 ‘현장’”이자 “보편적 사회운동의 주체와 역량이 조직되고 생성되는 토대”로서 ‘지역’이 부각된 점을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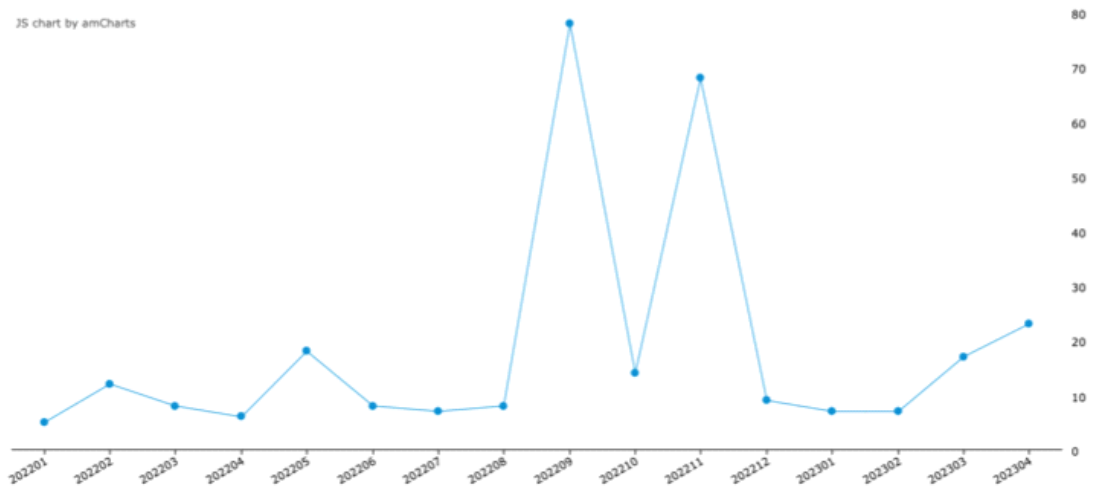
414 기후정의파업이 어떤 성과 혹은 영향력을 보였는지 지금 시점에서 선불리 단언하기는 어렵다. 사회운동의 결과가 항상 단기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적인 방식 보다는 여론 변화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간접적 경로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발제문이 ‘성과’라 평가한 것들은 단기적인 차원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 범위에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414에 대한 평가가 단지 내부적 준비 과정과 당일 투쟁에 대한 평가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후정의운동의 보다 큰 흐름과 방향 속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야만 기후정의운동의 중장기적인 전략과 계획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과를 논한 이후 발제문은 ‘반자본 대정부 투쟁’을 표방한 414가 “당일 하루 투쟁을 넘어 의미있는 사회적 여론과 투쟁흐름을 만들고자” 했던 목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역부족”이었다 자평하며 다음 행보를 함께 고민해보자 제안한다(7쪽). 기후정의운동이 여론과 주류 정치권의 향방에 변수가 될만한 조직적 힘이 부족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의미있는 사회적 여론과 투쟁흐름”을 목표로 세움에 있어 최대 목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현재 기후정의운동이 가진 역량에 맞춰 평가될 필요도 있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이나 에너지 민영화, 생태학살 정책을 뒤집을 만한 영향력은 없다 해도 이런 이슈들이 기후정의운동의 활동과 더불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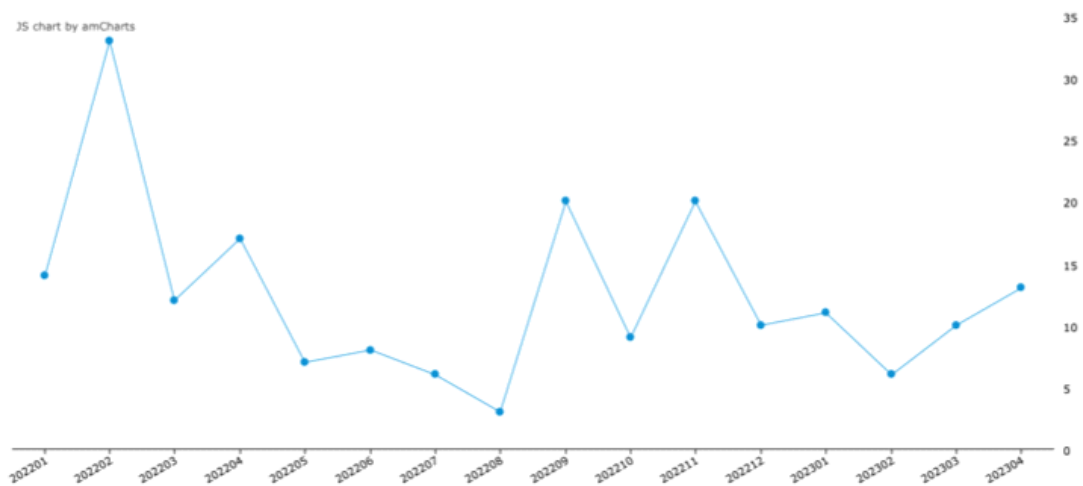
토론문은 기후정의운동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한 (쉬운) 방편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kinds.or.kr)의 뉴스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이용해 주요 언론에 2022년 이후 올해 4월까지 등장한 기후정의, 민영화, 생태학살을 비롯한 주요 개념어들을 검색해 그 결과를 시각화 해보았다.

이 단어들은 정의로운 전환, 공공성, 신공항 등에 비해 보다 뚜렷한 기후정의운동의 가치지향을 담고 있고 권력에 의한 포섭이 상대적으로 덜하기에 선택되었다. 체계적인 내용분석이 없는 조건에서 이 단어들이 언론에 노출된 것을 그대로 운동의 결과로 판단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기후정의운동의 언어가 언론에 기사로 실리는 것은 운동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의 제한적이지만 유의미한 징표일 수 있으며 이런 측면은 414가 조직되지 않았을 경우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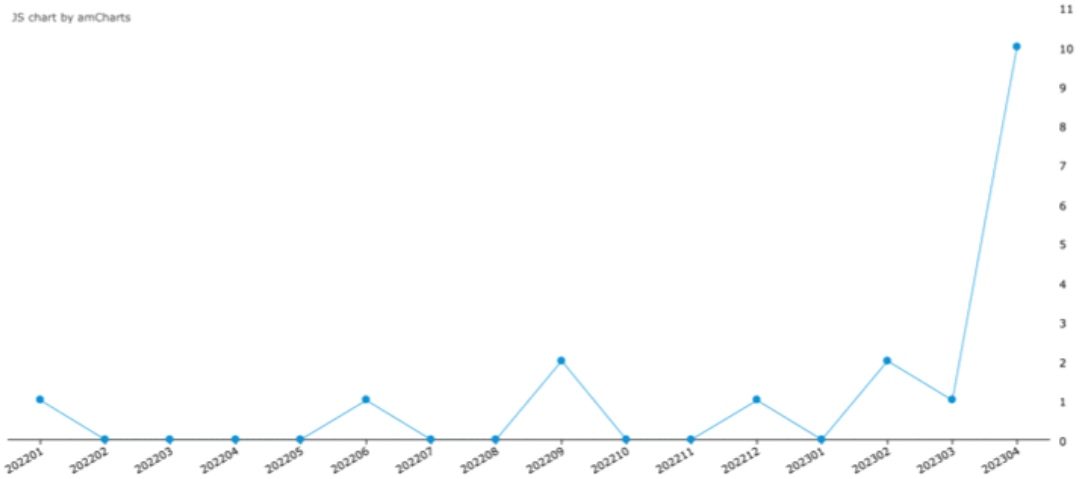
[표 1] '기후정의' 기사 빈도 (총 35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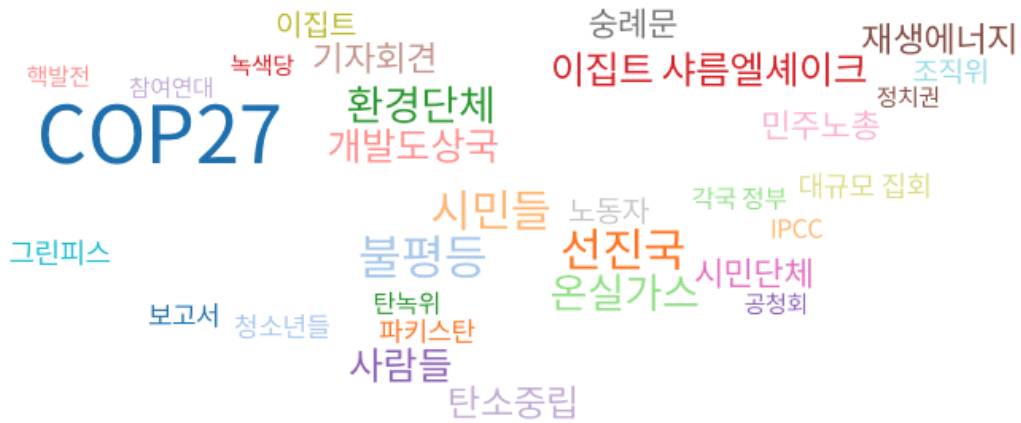
[표 2] '민영화' 기사 빈도 (총 214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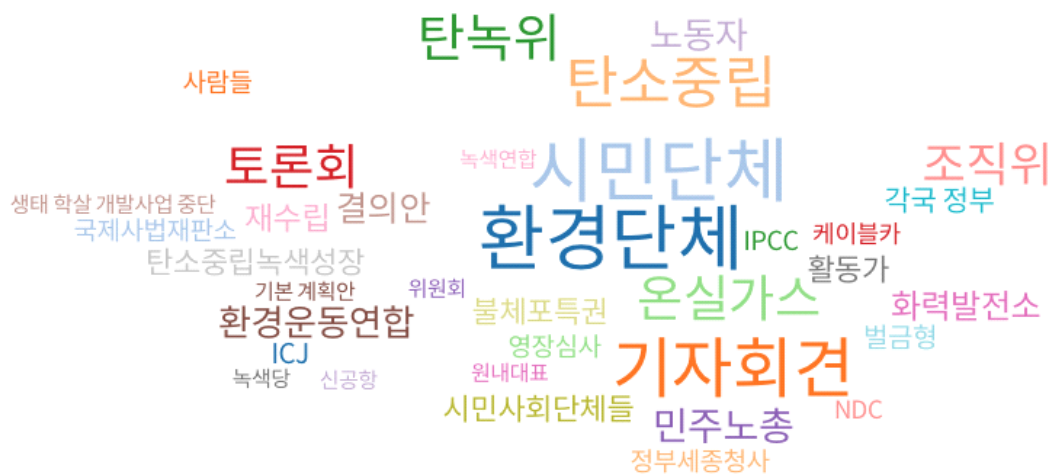
[표 3] '생태학살' 기사 빈도 (총 20건)



[그림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기후정의' 연관어 분석



[그림 2]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기후정의' 연관어 분석





이 결과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기반으로 우리는 이후 어떤 전략과 계획을 만들어나가야 할까?

414는 작년 924만큼 언론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일정 정도 흐름을 만들어냈다 볼 수 있다. ‘기후정의’의 경우 2022년 이후 작년 924와 COP27이 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고 ‘민영화’의 경우 대선을 전후한 작년 봄과 924, 11월 COP27 때만큼은 아니지만 414 준비과정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관찰할 수 있다. 가장 특이할 만한 점은 (비록 절대적 기사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전까지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생태학살에 대한 언급이 4월 들어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MBC나 JTBC 등 주요 방송사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가덕도와 새만금 신공항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뉴스 기사가 늘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생태학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을 전부 414의 성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414의 배경에 설악산과 새만금과 가덕도, 제주도, 장남들과 4대강 유역에서 벌어져왔던 끈질긴 투쟁과 그 투쟁의 요구가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동시에 414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기후 부정의와 생태학살에 대한 투쟁들을 모아내는 공간으로 기획되었음을 생각해본다면 이에 대한 414의 역할이 없었다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는 현장에 뿌리내린 끈질긴 투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후 ‘지역’에 거점을 둔 기후정의운동을 고민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지점이다.

‘기후정의’와 ‘민영화’ 언론 빈도수 추세는 기후정의운동 외부적 요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민영화’의 경우 윤석열의 정책이 민영화로 귀결될 거라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방으로 인해 대선 시기를 전후해 큰 빈도를 보였고, 이는 ‘정의로운 전환’이나 ‘공공성’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22년 이전의 시기를 보면 ‘기후정의’가 등장하는 기사 빈도도 절대적으로 COP이나 해외의 대규모 혹은 두드러지는 기후정의행동에 의해 크게 영향 받는다. 이는 발제문에서 나온 ‘역부족’의 현실을 보여줌과 동시에 “정세적 개입”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하지만 924 기후정의행진이 열렸던 작년 9월 ‘기후정의’와 ‘민영화’에 대한 언급이 많아진 것은 기후정의운동이 대규모 행동이나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 등 자체적으로 가진 힘을 통해 어느 정도 언론의 주목을 끌어낼 수 있음을, 그리고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점은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언론에 등장한 ‘기후정의’ 기사들(356건)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기후정의’로 검색된 기사들(58건)이 어떤 맥락에서 보도되었는지 보여주는 ‘연관어 분석’을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진다. [그림 1]의 경우 기후정의가 주로 COP27을 비롯해 해외 사건과의 연관 속에서 보도되었다면, 2023년 기사들만 대상으로 한 [그림 2]의 경우 다양한 단체들의 다양한 기후행동의 맥락 속에서 보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기후정의운동이 사회적 영향력을 보이기 위해선 뾰족한 요구에 기반한 투쟁을 벌여나가는 것과 함께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공동행동도 무시해선 안된다는 점을 암시한다.

## 대중적 기후정의운동의 장으로서 하반기 투쟁

강은빈(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2019년 국내 첫 기후위기 대중 집회 이후

기후위기비상행동 출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기후위기 앞에 자발적으로 결집한 시민사회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2022년 대선 결과, 윤석열의 당선으로 정권 유지에도 실패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후운동 진영에는 구체적인 풀뿌리-정치운동 전략이 부재했습니다. 수 많은 단체들은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힘쓰거나, 구심점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개인들과 단체들은 있으나, 구호를 넘어 기존의 조건에서부터 관계 전환을 실천하고 낯선 이들을 환대하는 단체는 드물었습니다. 그 결과 시민사회는 서로 손 내밀고 질문하고 대화하기보다, 의심하고 거리를 두며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평가를 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중복된 단체와 소속으로 피로도가 늘고, 조직력과 결속력은 줄어들었습니다.

삼척 맹방, 부산 가덕도, 군산 새만금, 제주 비자림, 용천동굴, 지리산, 설악산, ... 합법적 절차와 승인으로 전국 각지에서 국가 주도의 생태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행동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고, 제도와 규범이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나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규탄한다, 퇴진하라 외치는 구호만이 우리가 낼 수 있는 목소리일까? 벌금을 각오하고 현행법 위반을 해야지만 우리는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걸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또는 다들 하니까, 뭐라도 해야 하니까,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 절박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왜 모여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되새기며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 반대와 대안을 넘어선 전환의 주체: 풀뿌리 정치운동을 시작할 때

“민들레가 어디서든 잘 자랄 수 있는 건  
어디로 데려갈 지 모르는 바람에  
기꺼이 몸을 실을 수 있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지”

본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설득하고, 무리를 이루며, 때로는 정면으로 부딪히고 싸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치적 주체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

리들의 행동은 어설플 반항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지구 공동체의 운명에 얽혀 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현존하는 국가와 자본의 권력에 대항하는 조직된 정치운동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지난 4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국가 계획을 뒤엎는 걸 보고, 저는 윤석열 정부의 생태학살 정책과 국가 목표를 뒤엎을 생태전환 정부 수립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이 단체 내 성폭력 사건을 겪고 회복하는 가운데 2023년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직을 맡기로 결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풀뿌리의 핵심은 ‘관계’와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있는 이들의 안녕을 살피지 않고, 관계와 맥락을 살피지 않는 운동은 뭉툭하고, 뻣뻣합니다. 관계와 일상의 전환 없이는 체제의 전환도 없을 것입니다. 기후운동을 하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혼자서는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생명답게 살아갈 수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이 취약하게 보일 수도 있고, 의존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그렇게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정답을 알지 못하고, 늘 갈팡질팡합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도, 체력도, 감정도 유한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서로를 환대하고, 침투하고, 얽히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 매일 광장과 공원에 모여 대화를 나눕시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 : 2 - 3 )

우리에게 생동하는 현장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이 서로에게 흘러, 함께 어우러지고 연대하고 하나되는 경험이 가능한 현장이 필요합니다. 대중적인 요소로 쉽게 언급되는 것이 재미, 트렌드, 청년인데요. 저는 셋 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생명력입니다. 현장에 활기가 넘치는지, 생명력이 느껴지는 현장인지는 잠시 지나가는 시민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할 말을 준비해서 거리로 나가 마이크 잡고 외치는 일은 활동가들에게 익숙합니다. 앰프 소리와 마이크, 모니터가 필요한 현장들도 있겠지만, 상대의 눈을 마주치고 좀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낯선 존재에게 귀를 기울이고 품을 들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5월부터 주기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가능한 지역의 광장에서, 공원에서 열린 대화의 장을 열었으면 합니다. 바라건대 그 곳에서부터 기후정의운동이라는 씨앗이 심기고, 싹을 틔울 것입니다. 목표로서 성과로서 인원 수를 세고 언급하는 건 이제 지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모이는 만큼, 준비된 만큼 서로를 맞이하고, 삼삼오오 얼굴을 마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대하고, 연대하는 장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